

## “광주 군 공항 이전, 무안공항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김영록 전남지사 ‘군 공항 이전 4개 전제조건’ 제시  
오늘 특별법 공포…“무안군민에 설명 등 적극 역할”

대학·단체 “무안군 전향적 고민을”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의 공포에 맞춰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실천, 광주시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공개,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 및 속도 조절 등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방부, 광주시, 이전 대상 지자체 등과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 서남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이 조만간 개항할 예정으로, 10년 내에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실천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2018년에도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해 전남도가 협력하겠다는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2021년 무산됐다”며 “광주에 광주공항이 있다 보니 무안국제공항이 광주·전남·전북의 공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하려면 민간공항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일정 기간 민간공항을 유지하려는 것도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시가 통 큰 지원책을 먼저 내놓는다면 전남도 역시 그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군 공항이 어디로 가서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전남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 시정에게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실천, 이전 대상지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 마련 및 공개 등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안군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공정한 찬·반 논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련 정보가 예

### 군공항 이전 4대 전제 조건

-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실천
- 이전 대상지 구체 지원 방안 공개
-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속도 조절

곡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안군이 반대하더라도 전남도가 국방부와 협의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무안군민은 전남도민이기도 하다”며 “무안군민들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불편한 점, 좋은 점을 따져보고 숙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음 피해가 문제라면 저감 대책을 더 마련해볼 수도 있으며, 군 공항이 오면 민간공항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정보가 사실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무안)군 당국이 노력해줘야 하며,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전남도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남 입장은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군 공항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엇이 순리인지를 말하고 (무안군민과)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광주시와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이르면 5월 또는 6월로 설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 지원책도 모른 채 유치지향서를 접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에 벗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로드맵과 관련 광주시가 전남도와 협의한 적이 없고, 광주시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광주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론 속성 기간을 쥐어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함평군과 국방부에 여론조사 사유, 유치의향서 접수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목포대 총학생회 등 4개 대학 및 단체 20여 명은 전남도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그간 활성화하지 못했던 무안공항 기능이 회복되고 무안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늘려라”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역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기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尹 5박7일 미국 방문…내일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길에 나섰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계 전문가들과 만나고 우주 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한다.

당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간 친교 시간이 마련된다.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해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밀도 있는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건부 가능성을 시사한 우크라이나 무

기 지원 등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회담 당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한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다.

오는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은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핵심 이벤트다.

윤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영어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 7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회 연설 뒤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오찬이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30일 귀국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161억 ‘입찰 담합’ 교복 비싼 이유 있었다 ▶6면
- 굿모닝 예향 - 남도 오디세이 미로 ‘함평’ ▶18-19면
- KING 이강인, 70m 드리블 원더골 ▶22면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